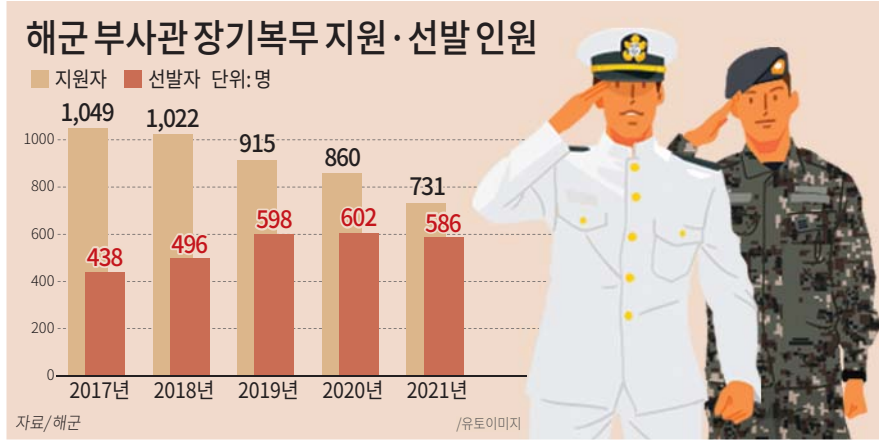


부동산 천정부지 오르는데... 군인 주택수당 27년간 '8만원'

주한미군은 연간 최소 4천만원에 매달 157만~210만원 지급받아 군인아파트·관사 노후화 심하고 병 생활관 보다 냉난방시설 열악 초급간부는 영외거주도 쉽지않아 장기복무 꺼리는 등 군 이탈 우려



이와 함께 매월 계급별 해외주택 수당도 선납으로 지급한다.

국군의 최하위 병 신분에게 해당되는 E1-E3 계급이 매달 받는 주택수당은 2017년 기준으로 157만원 정도가 된다. 병복무 경험이 있는 O-1E(소위)는 160만원, O-1(소위)은 157만원, 대령급 이상 고위장교는 210만원 정도를 매달 각각 지급받는다.

주한미군들은 기지내 대단위 편의시설과 학교, 병원 등이 갖춰진 밀리터리타운이 있어, 영외보다 영내 거주를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국군의 군인아파트나 관사는

일부 도심지역의 신축 외에 대다수는 병 생활관보다 냉난방시설이 열악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다. 초급간부는 물론 기혼간부들도 자녀교육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군간부들이 영외거주를 희망하지만 쉽게 나가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한 해군 부사관은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할 때까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저를 비롯해 일부 부사관이 군인아파트나 관사가 아닌 민간 주택을 임대해 영외거주를 신청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군의 한 예비역 소령도 “신혼시절 영외거주 신청하면 육먹을 게 뻔해서 지은 지 25년 된 관사입주를 눈치보며 입주했는데, 전 거주자인 상급자가 낡고 찌든 장관을 10만원에 떠넘긴 기억이 난다”면서 “요즘은 주택임대료가 비싼1급지 기준으로는 3억원, 최하위인 5급지는 8000만원 정도의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도 생겨났지만 초급간부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주택수당 문제 못풀면 초급간부 대거 이탈도...

본지가 해군 간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장기복무 지원자는 선발허용 인원수와 선발인원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줄어들었다. 2017년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은 438명에 1049명이 지원했지만, 지난 5년 간 상호 반비례 형태로 추이는 바뀌었다.

지난해 해군 장기복무 선발허용 인원은 616명이었으나 선발자는 586명이었고, 지원자도 731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소요는 늘고 있지만, 우수한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꺼린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해군 부사관들은 “해군 부사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 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야지훈련과 격오지에 배치로 어려움이 많은 해병대와 육군도 우수부사관은 장기복무를 꺼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당직비와 시간의 수당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군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나마 해군은 기지 규모가 크고, 대규모 복지센터 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 대병력이지만 주둔지는 소규모로 나뉜 육군의 경우 해군과 같은 복지센터는 꿈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의 전방상비사단의 경우 대배별로 주둔지가 나뉘어져 있고, 후방의 지역방위사단도 병력규모가 작아 단위부대별 복지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대임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주둔지를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형성된 밀리터리타운 건립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산업부, 2027년 국가 에너지효율 25% 줄인다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업 등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다소비 기업 30곳과 협약 체결

정부가 국가에너지효율을 2027년까지 25%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정책 방향도 공급측면에선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측면에선 그간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20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원단위로 25% 감축하는 규모로 G7 평균 수준이 된다.

이를 위해 사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연간 20만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곳과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을 체결한다. 이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에 이른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등 3대 효율 관리제도에 대

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시백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시백 사업도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전면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

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1~5등급제로 개편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등 교통망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효율투자 조세지원과 녹색보증 신설, 기존 용자·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LG서 독립 LX홀딩스 등 12개사 '계열분리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홀딩스 등 12개사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5월 3일 LX홀딩스 등 12개사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LG와 LX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G측이 보유한 LX 측 계열회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 미만이다. 또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 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 LG그룹과 LX측 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범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를, LX는 반도체·물류·상사를 각각 주력사업으로 한다.

경영계 9160원 vs 노동계 1만890원 '진통 예고'

노사 요구 최저임금 격차 '1730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사실상 올해와 같은 동결(9160원) 수준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에 달해 향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사용자 위원은 이날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핵심인 지불능력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셈이다.

이틀 전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세종=한용수 기자